

# 제1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1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18



G20 정상 회담(2018년 11월)

---

# 제1절 세계 안보정세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안보위협 지속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sup>1)</sup>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유럽 지역은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유입, 테러 위협,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난민할당제 도입을 통해 난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유럽 일부에서 반유럽연합, 반이슬람, 반난민 정서 확산에 따른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유럽연합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에서 일반 대중과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ISIS<sup>2)</sup>에 의한 테러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역내 반이슬람·반이민 정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 덴마크, 몰타, 영국을 제외한 25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신무기와 군사 장비 개발에 공동투자하고 군사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sup>3)</sup>)’ 구축에 서명하고, 17개 협력 사업을 합의하는 등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ISIS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중동

---

1) 2017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 이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 추진

2)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3)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지역 내 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면서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과 반군 세력 간의 갈등 및 터키군의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년 간 지속되어온 예멘에서의 내전은 평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종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은 2018년 5월 미국의 이란 핵 합의(JCPOA)<sup>4)</sup> 탈퇴 선언과 대이란 제재 복원, 예루살렘으로의 미국 대사관 이전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저발전, 국가역량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 등 만성적인 문제들로 인한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 종족 간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발생 등 정치·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소말리아에서는 2017년 10월 알샤바브에 의한 차량 자폭공격으로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말리 등에서는 보코하람, 알샤바브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2.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요인 다양화 및 범위 확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 영역을 상실한 ISIS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경이 필요 없는 ISIS 2.0<sup>5)</sup>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 역시 심각한 초국가적 위협의 하나이다. 민간 기관은 물론 정부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2017년 6월 닷페트야 랜섬웨어 공격, 2018년 3월 터키 가상화폐거래소 공격 등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각국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애쓰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도 국제 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어 2015년에는 메르스가 26개 국가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사회는 감염병을 중요한 안보위협<sup>6)</sup>으로 인식하고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4)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함께 2015년 7월에 체결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합의문서(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5) 글로벌 테러 확산, 무명테러 증대, 노마드형 테러 등이 주요 특징

6) 2014년 9월 18일 유엔 결의 제2177호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전례 없는 에볼라 발병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멕시코 강진, 발리 화산분출,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는 지진이,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하와이 화산 분화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재해·재난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국가만의 능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호, 재건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 3.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강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은 국경의 제한 없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제 사회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구축과 효과적인 위협 대응을 위해 지역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sup>7)</sup>)뿐만 아니라 유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sup>8)</sup>), 사이버스페이스 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15년 9월 제2차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에서는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이 국제정치·경제·사회·안보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각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유엔 글로벌 재난경보·조정 시스템(GDACs<sup>9)</sup>)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정보, 재난 구호 현황과 계획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지역 다자안보협의체에서도 재난구호 방안을 논의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7)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8) ASEAN Regional Forum

9) Global Disaster Alert and Coordination System

##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또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정세는 한반도 비핵화 변수와 맞물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 1. 역내 안보 구도의 유동성 증대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기조하에 국가안보전략(NSS)<sup>10</sup>과 국방전략(NDS)<sup>11</sup>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전략적 경쟁을 공식화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4자 협력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 아태 지역 배치 전력 증강 추진, 재래식 전력 강화, 핵 억제능력 현대화,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등 군 현대화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청사진으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소강(小康)<sup>12</sup>사회 건설의 전면적인 기초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통한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향후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sup>13</sup>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협조주의에

10)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안보 관련 최상위 문서(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

11)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미 국방부가 작성하는 문서로, 미 합참의 「국가군사전략(NMS)」 등 하위 문서에 대한 작성 지침(NDS : National Defense Strategy)

12) ‘소강(小康)’은 중국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의 ‘온포(溫飽)’ 다음 단계를 말함.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의미

13)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 또한 자위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보유하고 유지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수동적 방위전략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sup>14)</sup>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2018년 이후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다차원 횡단 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 등 국제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신동방정책<sup>15)</sup>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2.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 동향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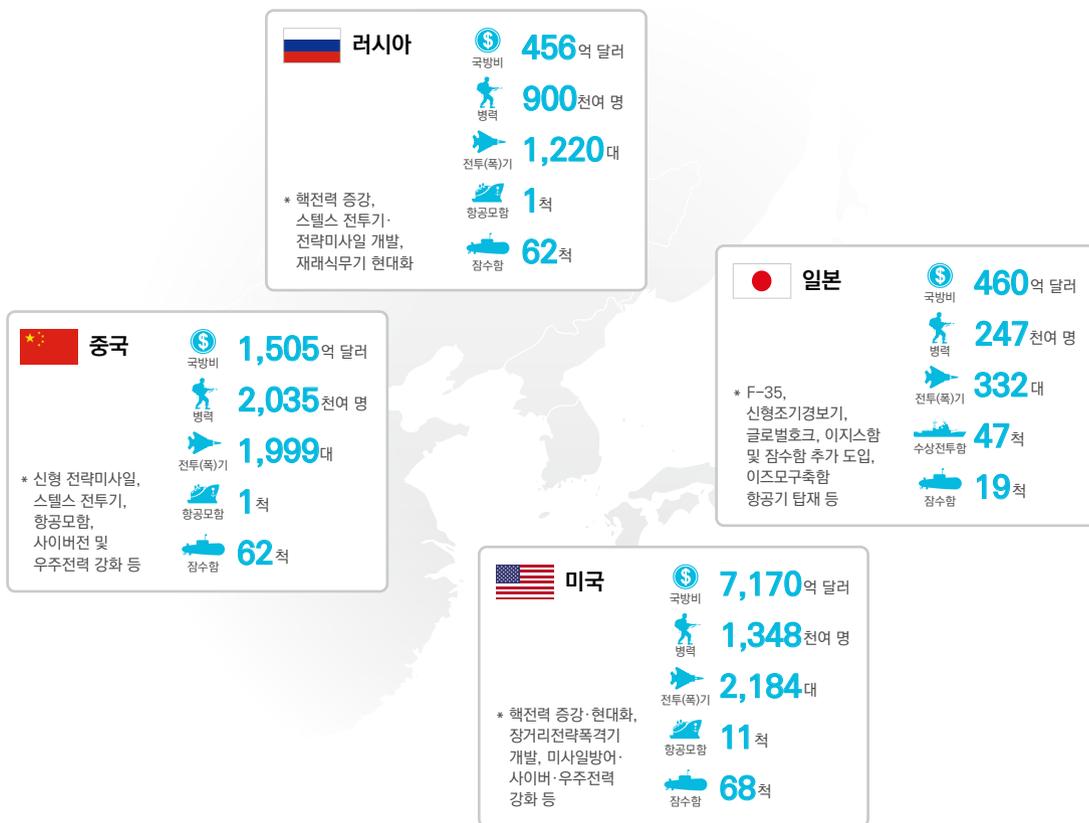
**| 미국 |**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과 2018년 「국방전략(NDS)」에서 본토 보호, 자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와 영향력 확대 등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평가하면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 견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주권 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해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과 다자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역내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미·일·호, 미·일·호·인 등 소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확대된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지역의 비확산 체제 유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미국은 2018년 5월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고, 역내 미군 주둔 확대와 군사훈련 및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14)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술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일본이 그 국력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

15) 신동방정책은 극동개발과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및 강대국 러시아 재도약을 위해 2012년부터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여 추진 중이며, 2015년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통해 본격화

[도표 1-1]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8」(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미국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А)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sup>16</sup>)’을 발전시켜 최적의 합동군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 3축체계를 현대화하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지하에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А<sup>17</sup>)」에 서명함으로써, 2016년부터 매년 국방비를 증액시켜 ‘힘을 통한 평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예산 사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전년 대비 국방비 170억 달러 증액(7,170억 달러,

16)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GDP 3.1% 수준)과 군 병력 2만 4,100여 명 증원을 추진하고, 대비태세 강화, 새로운 위협 대응, 군별 현대화 계획, 동맹국 및 우방국 지원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망라하였다.

육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47만 6천여 명에서 1만 1,500명을 증원하고, 전술 차량 3,000여 대와 다목적 장갑차량 200여 대 등 전력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군 현대화 추진을 주도하기 위해 2018년 6월 육군성 예하에 ‘육군 미래사령부(AFC<sup>18</sup>)’를 창설하였다. 해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51만 2,000여 명에서 8,600명을 증원하고, 핵잠수함 2척,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등 전력구축 사업을 승인하였다. 공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32만 5,000여 명에서 4,000명을 증원하고,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 기존의 획득 및 성능개량 예산을 정상 편성하여 전력을 증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F-22의 지상공격과 전자전 능력을 보장하고 있으며, B-2와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sup>19</sup>)를 개발 중이다.

아울러 이번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당 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을 제한하였다. 한편 2018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외교적·군사적 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켜 나갈 것임을 지속 강조하였다.

미국은 사이버 및 우주 분야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8월 사이버 사령부를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춘 통합사령부로 격상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우주 분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군 창설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분야에서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중국 |** 중국은 군의 현대화와 동시에 고효율적인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세계 강군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기계화 실현 및 정보화 건설, 2035년까지 국방·군대 현대화 실현,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 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 1,069억 위안으로 책정하고, 2015년 병력 30만 명 감군 선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감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군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공방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구역방어형에서 전역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대의 경량화 및 기계화, 지속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연안 방어전략과 근해 방어전략을 거쳐 원해호위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12년 라오닝 항공모함 전력화에 이어 첫 자국산 항공모함 취역 노력 등 원거리 투사능력 향상을 추진하

---

18) Army Future Command

19) Long Range Strike Bomber

고 있다.

공군은 걸프전 및 코소보전 등 현대전의 영향을 받아 국토방공 위주 형태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형태로 전략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토방공임무 전담 요격전투기는 감소한 반면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와 전폭기는 급증하였다. 또한 원거리 작전능력을 지원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수송기, 공중급유기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등 급속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로켓군은 핵 반격 능력과 중·장거리 정밀타격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가운데 차세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DF-26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DF-41의 전략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극초음속 비행체(HGV)를 탄두에 탑재 가능한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인 DF-17의 시험발사를 실시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대응한 신형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2015년 12월 31일에 창설된 새로운 군종으로, 군 작전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 심리전, 우주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하여 우리 영해에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용기 및 민항기와의 상호 충돌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주한 중국 무관을 7차례 초치<sup>20)</sup>하여 엄중 항의하고,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한 바 있다.

**| 일본 |**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에 따라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 제<sup>21)</sup>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급유와 탄약 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안전확보 및 출동경호 임무 추가 등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8년 말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서 '다차원 횡단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고, 2018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5조 2,986

20) 2018년 2월 27일, 4월 28일, 7월 27일, 8월 29일, 10월 29일, 11월 26일, 12월 27일

21) 자위대법·선박검사활동법·국제평화협력법·무력공격사태법·중요영향사태법 개정 및 국제평화협력지원법 신설 등

역 엔으로 확정하였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의 각종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육상총대<sup>22)</sup>를 신설하고, 조어도(센카쿠, 다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였으며,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향후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위함부대의 대응능력 향상, 잠수함부대 및 고정익 초계기부대의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sup>23)</sup>

항공자위대는 일본 주변의 공역에 대한 상시 경계·감시를 위해 항공경계관제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서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였다. 향후 2023년까지 신형 전투기(F-35A 42대), 신형 조기경보기, 채공형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하여 창설한 사이버방위대와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부대를 증원하여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부대를 통합하여 2020년 '우주·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우주 공간에서 각국 인공위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주를 감시하는 전문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력증강과 더불어, 통합막료장이 각종 사태 발생 시 부대 운용에 전념할 수 없는 결점을 보완하고, 총리 보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합사령부'<sup>24)</sup>를 창설하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군 조직을 개편하였다.

**| 러시아 |** 러시아는 군 구조 및 편제 개편, 장병 임금 인상 및 군 주거 환경 개선 등 과감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대내외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건설에 매진해 왔다. 특히 2017년까지 전력증강 결과 전투장비의 59%를 현대화하였으며, 야루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대 등 전략부대를 증·창설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하였다. 2018년부터 향후 8년간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약 34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전환경하에서 군관구별 특색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별 현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2) 육상자위대의 각 부대를 신속·유연하게 전국적으로 통합운용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

23)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을 위해 2023년까지 호위함을 47척에서 54척으로, 이지스함을 6척에서 8척으로 증강하고, 고정익 초계기는 P-1 신형초계기 위주로 65대를 유지할 예정임. 또한 초계 헬기를 76대에서 80대로 증강하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시킬 예정이며, 이즈모형 구축함에 F-35B가 탑재 가능하도록 개조를 검토 중

24) 2018년 12월에 개정한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육·해·공자위대의 전력을 통합하여 지휘하는 통합사령부 창설에 대하여 명기

육군은 군관구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서부 군관구는 국경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빠드-2017 훈련을 실시하였고, 1만 3,000여 명의 병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최신형 탱크 ‘아르마타’ 등 주요 전략무기체계가 대거 참여하였다.

해군은 2018년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해군은 2017년에 중국과 정례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제고하여 역내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2018년 전력화를 목표로 MIG-35 다목적 전투기, SU-57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TU-160 장거리 전략폭격기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미사일군은 2017년 토폴-M 전략핵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하였고, 핵전력 야루스 대륙간탄도미사일 3개 연대를 전력화하였다.

한편 동부군관구는 2017년 TU-95, TU-22를 주력으로 하는 전략폭격기 사단을 창설하였고, 대규모 항공기동훈련, 특수부대 상륙훈련 및 대테러훈련 활성화 등 극동 지역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함대는 기존의 S-300방공대대를 S-400방공대대로 교체하여 방공전력을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에서도 기존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해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노력과 함께 핵개발에 따른 제재 및 고립국면 탈피를 위한 외교활동에 주력해 왔다. 또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해 왔으나, 2018년 들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면서 남북 및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해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

---

### 1. 북한 정세

**| 내부 정세 |**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에 이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권세습을 공식화한 이후 2011년 12월 17일 최고지도자의 유고에 따라 신속히 권력을 이양하였고,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세대교체하면서 정권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7차 당대회와 제13기 제4차 6월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동시에 기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하고 국무위원장을 정권의 공식적인 최고수반으로 공표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른 제도적·법적 통치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정권 차원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7년에는 9월 3일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소위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핵탄두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하는 한편 경제 자립성 강화와 함께 주민 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한 이후 정권 차원에서 경제 현장 위주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공개매체 등을 통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증산돌격운동 등을 강조하며 경제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 9일 정권수립일 70주년을 계기로 3년 만에 사면조치를 단행하고 대규모 열병식 및 집단체조와 해외 고위인사 초청,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탈피를 시도함과 동시에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 및 정책 변화

에 따른 외부 사조 유입과 주민들의 사상이완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사회주의 체제우월성에 대한 선전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경제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학교육 발전을 통한 중장기 경제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과학 인프라 증설 및 과학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 대남 정책 ▮**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상황 변화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의 방식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해 왔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국제 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우리 정부의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대응하여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남북관계는 급랭되었다.

2017년에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개최 제안 등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악화된 남북관계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한편 2017년을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설정하며 '추가적인 핵개발과 투발수단 전력화' 추진을 공언하였다.

2월 '북극성-2형'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까지 포함한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하였다. 특히 우리의 제19대 정부 출범 4일 만인 5월 14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정세를 긴장시켰으며, 이후에도 7월 6일 우리의 '베를린 구상' 및 7월 17일 남북 군사·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해 제재와 대화는 병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지속된 가운데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 특사단과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4월 27일에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문점선언」에 합의하면서 남북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후 북한은 당국 및 민간차원의 대남접촉을 지속하는 한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26일 4차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5차 남북 정상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며 「9월 평양공동선언」,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호응하고 있다. 한편 전력증강 등 안보 현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선전매체들을 활용하여 선별

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경제 활로 마련에 유리한 외부적 환경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남북 간 협력 및 교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적십자 및 군사,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국 간 접촉을 상시화하고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관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이행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당국 및 민간 투트랙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 대외 정책 |** 북한은 국제 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2018년 들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미 정상 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고립탈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2·29 미북 합의」<sup>25)</sup> 과기로 미국과의 공식적인 대화가 단절된 이후, 미국의 계속된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2017년 1월 미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한 가운데 8월 ‘괘 타격계획’을 공개하고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11월에 발사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이후 4월 20일 ‘핵·ICBM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어 5월 24일 외신기자단을 초청하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6월 12일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으며, 7월 27일 미군 유해 송환과 함께 동창리 엔진시험장 시설물 일부를 해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포함한 북미 간 후속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일 관계는 2014년 5월 양국 간의 「스톡홀름 합의」<sup>26)</sup>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일본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협의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일 정상 회담 추진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 대북 압박 정책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북일 간 대화는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부침이 반복되었다. 2016년 이후 중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북중관계는 경색되었으나, 2018년 들어 북중 양국은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북한은 3월 1차 북중 정상 회담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 정상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25) 2012년 2월 29일 미국의 대북지원을 대가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합의

26) 2014년 5월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재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기로 합의

시도하고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의 외교적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 대표단의 방중을 통해 북중 간 경제협력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러 관계는 2011년 북러 정상 회담을 통해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한 이후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금년 러북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4년 소치 올림픽,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여 친선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2018년 5월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시 북러 정상 회담 개최에 동의하는 등 북러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 군사전략** |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sup>27)</sup>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전략·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세습 이후에도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한편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WMD<sup>28)</sup>,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왔다.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육성 및 최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 군사지휘구조**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서 국방전력건설 사업을 비롯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의 총정치국은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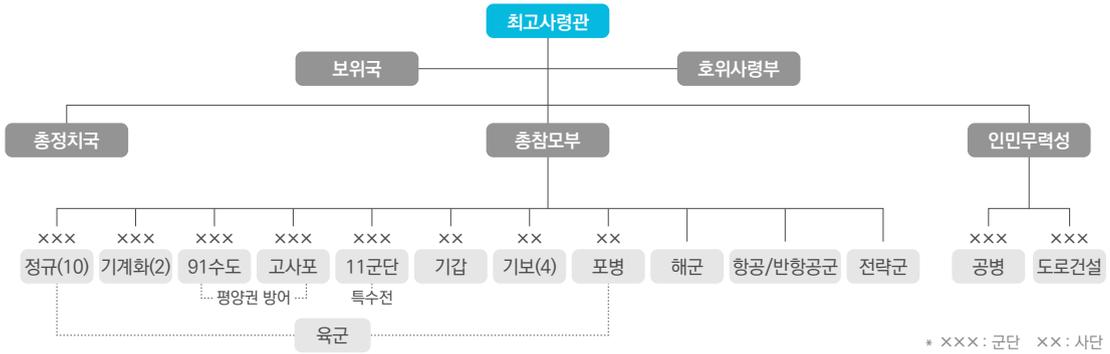
27) 북한 헌법 제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

28) 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며,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3. 군사능력

**| 육군 |**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91수도방어군단<sup>29)</sup>, 고사포군단, 11군단<sup>30)</sup>,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sup>31)</sup> 구축을 통해 C4I<sup>32)</sup>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수행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일부 배치된 300mm 방사포<sup>33)</sup>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29) 구(舊) 평양방어사령부

30) 전략적 특수전부대, 일명 폭풍군단

31) 지휘관의 결심 및 타격을 지원하는 체계(GS-2000)

32)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33) 수차례의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2015년 10월 당 설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실(實)장비를 최초 공개

가능하다. 또한 122mm와 200mm 견인방사포<sup>34)</sup>를 추가 생산하여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sup>35)</sup>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는 선군호 및 준마호 등 신형장비를 추가 생산하거나 부분 성능개량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sup>36)</sup>를 창설하였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도표 1-3]과 같다.

【도표 1-3】 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 장비

			
전 차 4,3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야 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 **해군** ■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및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34) 기존 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를 평시에는 화포만 운용하고 유사시 차량이나 트랙터 등으로 견인하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방사포

35) 북한군은 방사포탄을 개량하여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s)탄, 화염탄, 대공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공중작용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 및 운용 중

36)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 TV에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임무 등에 대해 보도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sup>37</sup>)을 배치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p>38</sup>) 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함정으로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 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은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

				
전투함정 43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공군** |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sup>39</sup>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4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sup>40</sup>와 SA-5<sup>41</sup>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 지역에는 SA-2와 SA-3<sup>42</sup>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7) Very Slender Vessle

38)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39) 기존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 변경(2012년 5월)

40) 최대사거리 56km의 중·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체계(SA-2 : Surface to air-2)

41) SA-2 보완용으로 개발된 최대사거리 250km의 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체계(SA-5 : Surface to air-5)

42) 최대사거리 25km의 중거리, 저·중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체계(SA-3 : Surface to air-3)

지상관제요격기, 조기경보기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동화 방공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는 [도표 1-5]와 같다.

[도표 1-5]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전투임무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4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해군 포함) 290여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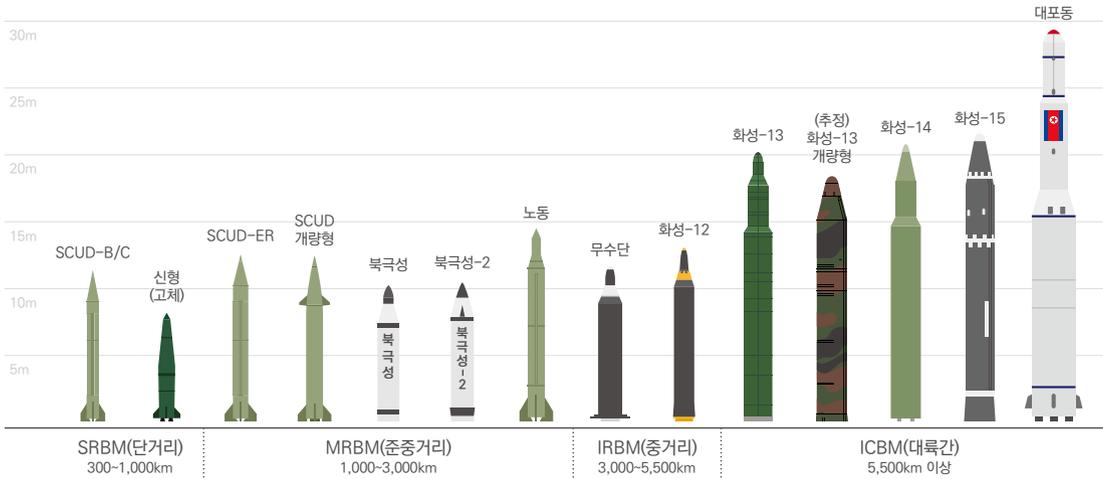
**전략군** | 북한은 전략로켓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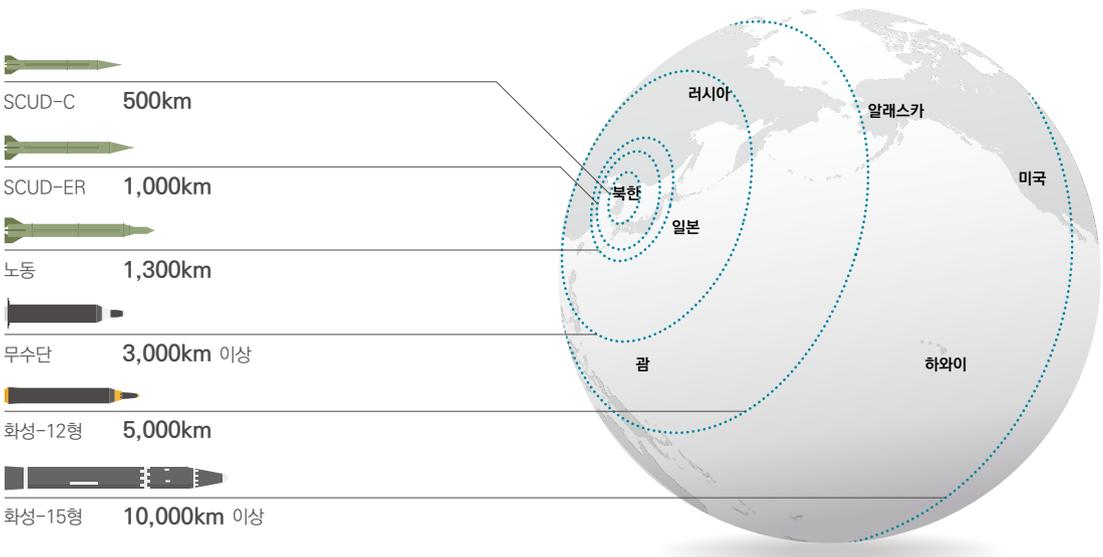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킨드-B와 500km의 스킨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킨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킨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이 현재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는 [도표 1-6]과 같다.

북한은 작전배치되었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14/15형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였다.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하였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그러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도표 1-7]과 같다.

[도표 1-6]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도표 1-7]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속능력** |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동적위군, 고급 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

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8]과 같다.

[도표 1-8] 북한 예비전력 현황

구 분	병 력	비 고
계	762만여 명	
교도대	60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17~50세 남자, 17~30세 미혼 여자)
노동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17~60세 남자,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자)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등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다.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전시 군수공장은 300개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군수공장에서는 전투임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와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